

박지원 변호사,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민심-당심-지도부 잇는 다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북 출신 박지원 변호사(38)가 선출됐다.

전북 출신으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는 정동영 국회의원과 김춘진 최고위원에 이은 쾌거다. 박지원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박 변호사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초로 평당원 출신이 당 지도부에 입성한 사례로,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자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전 당대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 전국에서 115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 및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4인의 후보를 선정했다.

최종 경선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됐고,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 6,000여명이 참여해 12.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박지원 변호사는 1987년 익산 출생으로 상산고 졸업 후 2006년 수능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4기로 졸업한 박 회장은 판사나 검사의 길이라

정청래 대표 공약 이행 전 당원 투표로 선정돼

‘당원주권정당’ 실현 새로운 이정표 세워

는 편안한 길을 포기했다.

그 대신 고향 전주 만성로에서 법무법인 ‘다지원’이라는 상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14년간 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헌신하며 힘없는 서민들의 ‘진정한 벗’으로 살아왔다고 자평했다.

기부와 봉사 그리고 나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왔다.

또한 최연소 전주시 체육회장을 맡아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전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주가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에서 검증된 역량을 선보여 왔다.

그의 당선은 오랜 시간 민주당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전북 지역의 ‘숙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 지난 2010년 정동영 최고위원과 2017년 김춘진 최고위원 이후 전북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의 공백이 7년간 이어져 왔다.

박 변호사의 당선으로 전북은 물론, 평범한 당원의 힘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우뚝 선 그의 감동적인 스토리에 전국의 당원과 시민들이 깊은 감동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최고위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북 출신 박지원 변호사가 선출됐다. 사진은 박지원 변호사가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조직도, 뒷배경도 없다. 오직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듯, 민주당도 평범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했다.

그는 당 혁신을 위한 세 가지 공약을 내놓아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첫째, 투명한 당 운영을 위해 최고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및 당원들이 직접 정책 제안하고 투표하는 ‘모바일 민주당’ 도입, ‘당론형 성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했다.

둘째,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민공천배심원단, 결선투표제, 정책 오디션 등을 도입하고, 후보 절반을 청년·여성·장애인 등 소수 계층에 보장해 다

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셋째, 민주당을 ‘정치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며 분기별 ‘정책 해커톤’ 개최, 재정·의사결정·공천 평가 등 모든 내부 데이터를 공개해 ‘투명정당 1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하며 “민심-당심-지도부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본업을 내려놓고 상근 체제로 전환해 혁신 목표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받았다.

그의 더불어민주당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당선을 통해 전북 출신 최고위원 당선이라는 큰 기쁨과 함께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가 지금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지방 국토관리청, 항공청)에서 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해 갈 것”

김윤덕 국토부장관, 안전분야 실무자 참석 워크숍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지방 국토관리청, 항공청)에서 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윤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 안전담당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가 가진 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다시금 환기하고,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작은 징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적 예방 대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장관은 국회국토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나 언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을 방문하는 등 초기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 역시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실무 현장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국토교통

부는 발 밑부터 하늘까지 국민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모든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며 “안전 업무가 현장의 실정과 처치를 고려하지 않고, 상부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방적, 일회성 업무로만 인식한다면 제대로 된 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든든한 동반자로 같이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실무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용지물”이라며, 현장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실무진 의견을 토대로 현장의 실정을 온전히 반영하고,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제안들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희재 기자

“전북 사과산업, 고령화·인력난 속 대책 시급”

윤정훈 도의원 “공공 주도 산지 유통·가공 시스템 절실”

전북 사과 산업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조차 인력이 부족하고, 유통·가공 체계는 경북 안동 등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어 농가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농가와 전문가들은 전북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주·진안·장수·남원 등 전북 사과 재배 농가들은 수확 후 선별과 유통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일부 농가는 1차 선별만 마친 뒤 경북 안동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안동은 농산물이 원물로 입고되면 현장에서 선별·경매까지 일괄 처리하고 대금도 신속히 지급하는 선진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



다. 전북 농가들이 “가장 부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하는 이유다. 전북 내에서는 장수군이 비상품 가공 확대, 산지 유통센터(APC) 활용 등 보완책

을 추진 중이나,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윤정훈 의원은 2023년 도정질문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사과와 같은 고부가가치 작목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이후 단계, 즉 유통·가공 체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산지 유통·가공 시스템과 통합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정질문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사과산업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과 농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 사과 주요 산지의 윤정훈·박용근·전용태·이정진·임종명 의원 등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책을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의원 등은 △주요 산지(무주·진안·장수·남원 등)에 공판장 및 APC 확충 △안동 모델과 유사한 집적 유통 거점 구축 △가공시설 확충과 판로 확보 병행 △유통 전문인력 양성, 농가 조직화, 공공·민간 투자 유도 등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해 학폭 가해자

2만722명... 매년 증가

울 상반기도 1만1000여명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72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5,436명, 2024년 2만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00명 늘어난 1만1,023명이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도목·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연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 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7,845건에서 2022년 4만3,013건, 2023년 4만3,629건, 2024년 4만4,057건으로 3년 새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다변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라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2025년 제2회 추경 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0일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등 소관 정책질의 및 추경 심사 등을 진행한 가운데,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최근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업무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전북이 국가 미래전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퍼지컬리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전북이 빠르게 선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여성보전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환경산업국 소관 추경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어린이집 5세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유치원무상교육비와 어린이집 무상 부모부담 필요경비가 교육정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한 동일 수준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국비 확보를 강화해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친환경 축산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며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추경 심사 첫 일정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퍼지컬 리사

업이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와 도 차원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질의하며, 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전문인력양성센터 국고보조금 중 일부 국비가 반납된 만큼,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대의 반납 내역을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응급상황 발생 시 원거지까지를 위한 스마트 인큐베이터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공감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인구 구조를 고려해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복지 사업도 함께 발굴·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중기 AI 도입률 저조...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정동영 통일부장관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 현 통일부장관 겸임)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전략이 논의됐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이 5.3%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AI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사용료 부담과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AI 적용률이 5.3%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로봇 서비스(RaaS)’ 도입과 통합 솔루션(엔드투엔



드)이 중소기업의 AI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클라우드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바우처와 클라우

드 바우처를 결합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2026년) ‘AI 원스톱 바우처’ 예산을 약 8,9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관련 규제 완화와도 추진 중이다. 이날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중소기업 AI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 늦출 수 없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 등과 면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

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책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물플라uster 인입선, △새만금~목포 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